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016)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선호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19대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준표**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방법론적 논의 및 이변인 분석
Ⅲ.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호
Ⅳ.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택
Ⅴ. 결론

| 논문요약 |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이 정치 참여, 정치적 선호, 정당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유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계층/계급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계층/계급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소위 '가난한 보수'나 '강남좌파'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나 다른 매개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연령효과나 매개변수를 제대로 통제하면 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기권할 확률이 높아지고, ② 여러 쟁점, 특히 경제적 쟁점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진보적이고, ③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에 투표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및 세대 균열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계층/계급에 따라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과 그 목소리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343).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www.kci.go.kr

을 동시에 보여준다.

▪ 주제어: 사회경제적 지위, 계급정치, 기권, 정치적 선호, 정치적 선택

Ⅰ. 문제의 제기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정치적 신념과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유권자들은 그들 자신의 계층/계급의 이익과 부합하는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해 온 것이다.[1] 이러한 '계층/계급정치(class politics)' 외에도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찰되는 계층/계급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정치적 현상은 소위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ocioeconomic status model, SES model)'의 예측과 부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에 비해 정치적 참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에 따르면 교육, 소득, 직업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참여에 필요한 시간, 돈, 정보 등의 자원을 더 소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관심 및 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의 측면에서도 참여에 유리하다고 한다(Verba & Nie 1972; Leighley 1995; 어수영·곽진영 2001; 박찬욱 2005).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래로 '계급정치 쇠퇴론(decline of class politics thesis)'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균등한 참여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2] 한국에서는 이러한 계급/계층과 관련된 정치 현상은 최근까지 본격적인

1)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유럽적 의미의 계급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계층, 계급,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2) 고원(2009)과 전병유·신진욱(2014)은 계급정치 쇠퇴론에 대한 논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3년 미국정치학회가 '불평등과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를 구성하여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Task Force 2004).

www.kci.go.kr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의 핵심적인 변수는 지역이었고, 제16대 대선 이래로 지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진보-보수의 이념 성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이 이념 성향의 차이는 계층/계급보다는 세대 간 차이에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었다(장승진 2013; 전병유·신진욱 2014). 사실 이 같은 지역 및 세대에 따른 이념 균열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서구와 같은 계급정치의 부재에 있다든지 혹은 심지어 하층 계층이 '계급배반적'인 속성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계층을 구성하는 교육, 소득, 직업 등의 변수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혹은 일관된 설명력을 갖지 않거나, 심지어 저소득층 유권자가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규정하거나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강원택 2003; 이갑윤 2011, 95-96).[3] 또한 투표에 한정하여 보면, SES 모델 역시 한국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의 결론이다(어수영·곽진영 2001; 박찬욱 2005; 김형준 2008; 이갑윤 2011, 37).[4] 계층/계급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를 한다거나 비용-편익 분석에서 투표 참가의 가치를 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층이 덜 투표한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론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계층/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계급투표(class voting)'는 그러한 계층/계급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의 존재 및 일정 정도 이상의 유권자의 계층/계급의식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5]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계층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반

3) 기존의 연구에 대한 개략적 소개는 강원택(2013), 이갑윤 외(2014), 서복경·한영빈(2014) 등의 논의를 참고하라.

4) 박찬욱(2005)은 투표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통상적 정치적 참여에서는 SES모델이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SES 모델의 예측과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로는 조성대(2006), 정준표(2008) 등의 논의가 있다.

5) 이갑윤 외(2014, 109-117)는 한국에서의 계급투표 부재를 진보정당의 부재나 정당의 동원전략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비판이론가들의 해석(최장집 1996)과 계급의식의 미약함에서 찾는 해석(김수진 2008)으로 분류한다.

www.kci.go.kr

영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각종 선거에서 재벌규제, 복지확충, 무상급식 및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된 것은 계층/계급이익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정당이 존재하고 이러한 계층/계급의식이 미약하나마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계층이 계급배반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적 선호와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나 계층거리감(장승진 2013; 서복경·한영빈 2014) 혹은 재산규모(손낙구 2010; 이갑윤 외 2014; 서복경·한영빈 2014) 등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나 세대를 통제하면 저소득층의 계급배반적 속성이 크게 약화된다는 연구(강원택 2013; 한귀영 2013; 전병유·신진욱 2014)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같이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계층 혹은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계급정치(class politics)'가 이미 영향력을 일정 정도 발휘하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그 사회적 토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과연 중하층을 포함한 각 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voice)'를 내는지, 그리고 그 계층의 규모에 비례하는 크기의 목소리를 내는지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계층별 목소리의 크기는 계층별 정치적 참여의 정도를 의미한다. 불균등한 참여(목소리)는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인 일표 원칙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시민의 필요와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상에 어긋난다(Verba 1996).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에서의 불평등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부, 그리고 교육 수준에 있어 더 특권적 지위에 있는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이는 실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Lijphart 1997).[6]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의 계급정치의 대두라는 일견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계층별 투표 참여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정치에 반영되지 않

6) 레이파트(Arend Lijphart)는 1996년 미국 정치학회 회장 연설에서 불균등한 참여를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라고 지적했다(Lijphart 1997, 1).

www.kci.go.kr

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정치적 선호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계급정치의 부재 및 SES 모델의 적용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방법론적 논의와 아울러 경험적 검증을 위한 자료 및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에 더해 이 장에서는 평균 비교,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연령효과를 통제하면 이러한 이변인 분석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투표 참여 확률 및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할 확률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제3장 제1절은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의 이슈 영역별 정책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진보적인 태도, 그리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절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슈영역별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부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그 결과는 이슈 영역별 정책평가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부평가 사이에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국가 경제상태 평가는 사회쟁점 평가보다는 외교안보 및 경제쟁점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4장 1절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 여부 및 정당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SES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치적 선호 및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연결고리로 하여 투표 여부 및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연령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계급배반적으로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제2절은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한다. 그리고 평균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권자와 투표 참여자와의 정치적 선호에서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 결과는 비록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최소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태도에서는 기권자와 투표 참여자 사이에 통계

www.kci.go.kr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낮은 투표율이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결론은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 이 글의 분석 결과의 함의를 제시한다.

Ⅱ. 방법론적 논의 및 이변인 분석

1. 방법론적 논의 및 분석 모형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쟁점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투표율은 낮아진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인 교육과 (월가구) 소득은 이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연령(세대)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교육(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 확률은 줄어들고 이념은 진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투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SES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빈곤보수'(한귀영 2013)와 고학력·고소득자이면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강남좌파'(윤평중 2011)라는 계급배반적인 현상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7] 사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SES 모델의 예측과 정반대되는 유의한 결과는 주로 이변인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SES 모델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SES 모델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정준표 2008). 한국에서의 SES 모델의 적실성 및 계급정치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려면 서구 사회와 다른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령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분석 모델 속에 포함하여 제외된 변수에서 오는 편의(bias)를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King et al. 1994, 169).[8] 한편, 이런

7) 교육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소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보-보수 이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육의 이념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8) 제2장의 세대별 5분위 SES, 세대별 5분위 교육 및 소득은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여 이변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변수들이다.

www.kci.go.kr

특성을 가진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때는 이 변수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택을 연결하는 매개변수(intervening or mediating variable)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매개가 일정 정도 이상이라면 이 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거나 아예 사라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감소할 것이므로(즉, 유의확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택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매개가 일정 정도 이하인 소위 '부분적 매개(partial mediation)'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줄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개변수일 가능성이 큰 변수를 그 매개의 과정을 분석할 수 없는 모델에 포함할 경우,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와 배치되는 결과를 얻기 쉽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①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변수(사회경제적 지위)가 종속변수(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②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③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종속변수에의 영향력을 분석하면,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은 감소한다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매개변수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택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 사회경제적 지위와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 사회경제적 지위와 매개변수가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 등 3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변인 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적 선호 및 선택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 역시 특정 변수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일 수가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사용할 분석모델인 인과관계의 과정에 따른 다단계 회귀분석(회귀분석, 이항 혹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통제변수 포함),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는 ① 교육,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를 포함한 각종 인구통계학적 변수, ②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의 쟁점 영역에서의 정

www.kci.go.kr

책 선호, ③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국가 경제상황 평가, ④ 정치적 선택(기권 및 비례선거에서의 투표 정당)으로 나눈다. 여기서 숫자의 크기는 가정된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①은 ②와 ③을 매개변수로 하여 ④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변수

이 글에서 사용할 자료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총선 후 조사' 결과로 실제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대인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고, 표본 크기는 2,047명으로 표집오차는 ±2.2%이다(박찬욱·강원택 편 2012, 8).

<표 1>은 이 글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로서, 가변수의 경우 투표 선택의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료하므로, 이하에서는 여타 연속변수(등간척도 이상을 가정한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시한다. '5분위 연령'은 월가구소득 및 교육 정도를 묻는 두 질문에 모두 응답한 2,037명의 응답자를 나이를 기준으로 크기가 거의 같은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하위 20%(5분 연령 중 1분위) '1'에서 시작하여 상위 20%(5분위) '5'까지를 부여한 값이다. 20대 이하, 30대 등의 통상적인 세대 구분 대신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아래 5분위 소득 및 학력 변수와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 글의 주 관심 대상인 소득과 교육 및 이를 결합하여 구성한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먼저 월가구소득 및 교육 정도를 묻는 질문에 모두 응답한 2,037명을 확인한다. 여기서 '5분위 소득'은 원자료의 월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에서 '⑨ 900만원 이상'까지의 9개 범주에 각각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부여한 값에 (원래의 순서가 보존되도록) 0과 1사이의 난수(random number)를 더해 나온 2,037개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이 순위값(소득 순위값)

www.kci.go.kr

에 따라 하위 20%(5분 소득 중 1분위) '1'에서 시작하여 상위 20%(5분위) '5'까지를 부여한 값이다. 따라서 더해진 난수에 따라 이 변수값(및 이하의 여타 5분위 변수들의 값)이 변할 수 있지만, 무작위성(randomness)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난수를 부여해도 기본적인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강건성(robustness)을 가지고 있다(Schlozman et al. 2012, 123).[9] '5분위 교육'은 원자료의 교육 수준에서 '초등학교'와 '서당, 한학'을 하나로 묶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서당 혹은 한학'에서 '⑦ 대학원(석사과정), ⑧ 대학원(박사과정)'의 8개 범주로 재분류하고, 여기에 각각 1에서 8까지의 숫자를 부여한 값에 0과 1사이의 난수를 더해 나온 2,037개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이 순위값(교육 순위값)을 '5분위 소득'의 측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한 것이다. '5분위 SES'는 '5분위 월가구소득'의 측정 과정에서 구한 순위값과 '5분위 교육'의 측정 과정에서 구한 순위값을 합한 2,037개의 값(SES 순위값)을 5분하여 분위수를 부여한 것이다.[10] <표 1>의 '세대별 5분위 SES'는 각각의 5분위 연령집단(세대) 내에서 위의 SES 순위값을 5분하여 분위수를 부여한 것이다. 한편 <표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대별 5분위 소득'은 각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 순위값을 5분하여 분위수를 부여한 것이고 '세대별 5분위 교육'은 각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 순위값을 5분하여 분위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세대별 변수를 구성한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할 때의 준거기준이 동일한 세대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고,[11] 제3절에서 보듯이 연령을 통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가 투표 등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5분위 변수 대신에 무작위성을 배제한 원래의 연령, 소득, 교육 자료를 그대로 혹은 변경하여 제3장 이하의 분석을 실시해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0) 이는 교육과 소득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SES를 측정한 것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연령 5분위 배율	SES 5분위 배율	SES(세대별) 5분위 배율
5분위 연령		2037	1, 5	3.00	1.414	5.000	0.513	0.997
5분위 소득		2037	1, 5	3.00	1.414	0.578	3.561	2.978
5분위 교육		2037	1, 5	3.00	1.414	0.411	3.493	2.138
5분위 SES		2037	1, 5	3.00	1.415	0.430	5	3.140
세대별 5분위 SES		2037	1, 5	3.00	1.413	1	2.796	5
쟁점평가 이념평균		2045	0, 10	4.97	1.882	1.325	0.860	1.028
외교안보쟁점 평가		2043	1, 4	2.60	0.399	1.067	0.962	0.998
경제쟁점 평가		2046	1, 4	2.42	0.405	1.041	1.015	1.061
사회쟁점 평가		2045	1, 4	2.83	0.504	1.047	0.985	1.019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044	1, 4	2.10	0.726	1.224	0.894	1.018
국가 경제상태 평가		2045	1, 5	2.44	0.805	1.038	1.040	1.071
가변수(N=2047)		퍼센트	연령 평균	소득 평균	교육 평균	SES 평균	SES(세대별) 평균	이념 평균
성별	여자	50.3	3.08	3.01	2.72	2.86	2.86	2.63
	남자	49.7	2.92	2.99	3.28	3.14	3.14	2.66
지역	서울/인천/경기	49.7	2.92	3.31	3.18	3.28	3.31	2.64
	대전/충남/충북	9.9	3.07	2.82	2.93	2.88	2.85	2.56
	광주/전남/전북	9.9	3.13	2.53	2.67	2.57	2.50	2.49
	대구/경북	10.2	3.07	2.78	2.97	2.87	2.83	2.73
	부산/울산/경남	15.9	3.03	2.79	2.81	2.74	2.73	2.76
	강원/제주	4.4	3.16	2.25	2.70	2.36	2.33	2.60
직업	기타/무직/무응답	32.0	3.02	2.80	2.90	2.84	2.91	2.63
	서비스	11.8	2.83	3.00	2.98	2.94	2.76	2.61
	판매	23.6	3.07	3.15	2.88	3.00	2.97	2.67
	농/임/어업	2.1	4.51	1.58	1.58	1.42	1.88	2.68
	기능	6.5	3.32	2.72	2.28	2.36	2.42	2.67
	기계조작 및 조립	1.5	3.16	3.06	2.74	2.94	3.00	2.82
	가사관련 단순노무	0.9	3.72	2.06	2.39	2.00	2.39	2.69
	기타 단순노무	3.9	4.09	1.77	2.04	1.71	2.35	2.74
	사무	13.0	2.21	3.72	4.07	4.10	3.81	2.60
	전문가	3.9	2.84	3.71	3.99	4.05	4.00	2.66
	임직원 및 관리자	0.8	3.65	4.35	4.12	4.29	4.47	2.63
투표 선택	기권	29.4	2.25	3.05	3.25	3.19	2.81	2.61
	새누리당	34.0	3.68	2.90	2.68	2.75	3.10	2.77
	민주통합당	25.6	3.02	3.04	2.99	3.02	3.01	2.56
	통합진보당	5.0	2.55	3.38	3.55	3.55	3.28	2.43
	자유선진당	1.9	3.08	2.89	3.00	2.95	3.18	2.56
	기타 정당	2.9	2.88	2.85	3.42	3.08	3.07	2.66
	모름/무응답	1.3	3.58	2.54	2.96	2.69	3.23	2.74
자가 여부	기타/무등답	27.1	2.58	2.56	3.12	2.80	2.50	2.60
	자가	72.9	3.16	3.16	2.96	3.07	3.19	2.66

'외교안보쟁점 평가'는 <부록>의 질문 1의 한미동맹 및 국가보안법 관련 2가지 질문과 질문 2의 대북정책에 관한 4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 것이다. 우선 가장 진보적인 응답에 1을 주고 가장 보수적

www.kci.go.kr

인 응답에 4를 주도록 응답항을 재구성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경우 4개 응답값의 평균을 구한다. 이 경우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대답한 질문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이는 이하 '외교안보쟁점 평가', '사회쟁점 평가' 및 '쟁점평가 이념 평균'에도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관련 질문의 응답값과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의 응답값,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 4개 질문의 평균 응답값의 평균을 구하여 '외교안보쟁점 평가'의 변수값으로 활용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 1의 한미 FTA, 복지 대 성장, 비정규직 노동자, 생필품값 관리 등 4가지 질문의 응답값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경제쟁점 평가'의 변수값으로 활용한다. '사회쟁점 평가' 변수값으로는 질문 1의 학교 체벌, 대체 복무, 사형 폐지의 응답값의 평균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쟁점 평가', '경제쟁점 평가'와 '사회쟁점 평가'의 평균으로 '쟁점평가 이념 평균'을 측정한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은 이갑윤·이현우(2008, 146-150)의 표현을 사용하면 주관적인 이념에 대조되는 '이슈평가 이념'에 해당한다.[12)]

한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및 '국가 경제상태 평가'는 <부록>의 질문 3과 질문 4를 활용하되 호의적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전자는 4점, 후자는 5점)가 배정되도록 응답항을 재구성한다.

3. 이변인 분석을 통해 본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이미 언급한 대로 연령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교육이나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투표 여부에 SES 모델에서의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영향을 미치고 계급배반적인 현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표 1>의 '5분위 배율'과 각종 평균값, 그리고 <표 2>의 변수 간의

12) 주관적 이념 점수는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고, 후보자들의 이념 평가 위치도 매우 자의적으로 결정되며, 투표 결정의 원인변수가 아니라 지지 후보의 정책적 입장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일 수 있다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갑윤·이현우 2008).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에도 응답자 본인 및 여러 정치인의 이념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는데, 0에서 10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안철수는 평균 3.92, 문재인은 평균 4.29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6대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김대중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유권자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권자들이 젊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진보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www.kci.go.kr

상관관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집단 중 최상위 (약) 20% 집단의 관심변수의 평균값을 최하위 (약) 20% 집단의 관심변수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서, 예를 들어 <표 1>의 ‘5분위 연령’ 기준 SES 5분위 배율 0.513은 SES가 가장 높은(5분위 SES=5) 집단의 5분위 연령 평균값 2.23을 SES가 가장 낮은(5분위 SES=1) 집단의 5분위 연령 평균값 4.34로 나눈 값으로 SES 최하위 집단이 최상위 집단보다 5분위 연령 기준으로 1.95(0.513의 역수)배나 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따라서 5분위 SES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것은 <표 2>의 ‘5분위 연령’과 ‘5분위 소득’(-0.296), ‘5분위 교육’(-0.562) 그리고 ‘5분위 SES’(-0.503)와의 상관계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대별 5분위 변수들이 ‘5분위 연령’을 통제한 변수라는 것은 <표 2>에서 ‘5분위 연령’과 이들 세대별 5분위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연령을 통제하면, 계급배반적 결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표 1>에서 ‘외교안보쟁점 평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선호와 관련된 변수를 기준으로 한 ‘세대별 5분위 SES 배율’이 1보다 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보수적 태도를 보이거나 정부 평가에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SES 5분위 배율’의 경우는 ‘경제쟁점 평가’와 ‘국가 경제상태 평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급배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표 2>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상관계수값이 음(-)일 경우는 계급배반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대별 5분위 변수의 경우는 ‘세대별 5분위 교육’이 ‘외교안보쟁점 평가’ 및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적 선호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대를 통제하지 않은 5분위 변수의 경우 ‘5분위 소득’과 ‘경제쟁점 평가’의 상관관계(0.065)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계급배반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분위 교육’은 정치적 선호와 관련된 모든

www.kci.go.kr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5분위 연령	5분위 소득	5분위 교육	5분위 SES	세대별 5분위 교육	세대별 5분위 소득	세대별 5분위 SES	쟁점평가 이념평균	외교안보 쟁점평가	경제쟁점 평가	사회쟁점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가경제 상태평가
5분위연령	1	-.296**	-.362**	-.303**	.000	.000	.000	.196**	.165**	.111**	.110**	.228**	.051*
5분위소득	-.296**	1	.383**	.806**	.246**	.866**	.730**	.010	-.037	.065**	.006	-.040	.037
5분위교육	-.362**	.383**	1	.794**	.730**	.194**	.546**	-.109**	-.131**	-.028	-.065**	-.146**	.009
5분위SES	-.303**	.806**	.794**	1	.574**	.635**	.769**	-.063**	-.100**	.014	-.039	-.112**	.023
세대별 5분위교육	.000	.246**	.730**	.574**	1	.267**	.705**	.008	-.034	.037	.010	-.006	.054
세대별 5분위소득	.000	.866**	.194**	.635**	.267**	1	.798**	.067**	.017	.093**	.044*	.024	.061**
세대별 5분위SES	.000	.730**	.546**	.769**	.705**	.798**	1	.065**	.003	.089**	.044*	.023	.067**
쟁점평가 이념평균	.196**	.010	-.109**	-.063**	.008	.067**	.065**	1	.732**	.610**	.702**	.263**	.119**
외교안보 쟁점평가	.165**	-.037	-.131**	-.100**	-.034	.017	.003	.732**	1	.296**	.316**	.282	.140**
경제쟁점 평가	.111**	.065**	-.028	.014	.037	.093**	.089**	.610**	.296**	1	.096**	.172**	.133**
사회쟁점 평가	.110**	.006	-.065**	-.039	.010	.044*	.044*	.702**	.316**	.096**	1	.103**	.034
대통령국정 운영평가	.228**	-.040	-.146**	-.112**	-.006	.024	.023	.263**	.282**	.172**	.103**	1	.293**
국가경제 상태평가	.051*	.037	.009	.023	.054*	.061**	.067**	.119**	.140**	.133**	.034	.29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투표 여부 및 지지 정당 선택과 관련한 정치적 선택에서도 연령을 통제하지 않을 때는 <표 1>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에 비해 기권한 유권자의 5분위 소득 평균, 5분위 교육 평균, 5분위 SES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SES 모델의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할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5분위 평균들이 새누리당 지지자의 평균들에 비해 높아서 계급배반적인 결과가 나온다.[13] 하지만 연령을 통제한 '세대별 5분위 SES'의 경우 기권한 유권자의 평균이 가장 낮고 새누리당 지지자의 평균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평균보

13) <표 1>에서 연령 평균과 이념 평균은 각각 '5분위 연령'의 평균, '쟁점평가 이념 평균'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예상과 같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표 1>에서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한 사례수는 결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빈도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ww.kci.go.kr

다 높아 SES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고 계급투표 역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5분위 소득'을 사용할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나라당 투표 비율이 감소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상관계수값 -0.053) 기권 비율은 증가하지만(상관계수값 0.021), 연령을 통제한 '세대별 5분위 소득'을 사용할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나라당 투표 비율은 증가하고(상관계수값 0.054) 기권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상관계수값 -0.079).

<표 3> 소득과 정치적 선택

5분위 소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기타 정당	기권	전체
하층	빈도	166	98	12	19	104	399
(1분위)	행%	41.6%	24.6%	3.0%	4.8%	26.1%	100.0%
중하층	빈도	139	103	11	20	127	400
(2분위)	행%	34.8%	25.8%	2.8%	5.0%	31.8%	100.0%
중층	빈도	120	107	30	30	118	405
(3분위)	행%	29.6%	26.4%	7.4%	7.4%	29.1%	100.0%
중상층	빈도	132	102	24	13	132	403
(4분위)	행%	32.8%	25.3%	6.0%	3.2%	32.8%	100.0%
상층	빈도	136	110	25	16	117	404
(5분위)	행%	33.7%	27.2%	6.2%	4.0%	29.0%	100.0%
전체	빈도	693	520	102	98	598	2011
	행%	34.5%	25.9%	5.1%	4.9%	29.7%	100.0%

* N=2011, Pearson 카이제곱값=35.313, 자유도=16, 유의확률(양측검정)=0.004/
소득과 새누리당 투표 여부의 Pearson 상관계수값=-0.053, 유의확률=0.018/
소득과 기권 여부의 Pearson 상관계수값=0.021, 유의확률=0.349

세대별 5분위 소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기타 정당	기권	전체
하층	빈도	125	93	15	23	144	400
(1분위)	행%	31.3%	23.3%	3.8%	5.8%	36.0%	100.0%
중하층	빈도	131	110	18	22	121	402
(2분위)	행%	32.6%	27.4%	4.5%	5.5%	30.1%	100.0%
중층	빈도	137	104	24	18	120	403
(3분위)	행%	34.0%	25.8%	6.0%	4.5%	29.8%	100.0%
중상층	빈도	144	104	21	18	118	405
(4분위)	행%	35.6%	25.7%	5.2%	4.4%	29.1%	100.0%
상층	빈도	156	109	24	17	95	401
(5분위)	행%	38.9%	27.2%	6.0%	4.2%	23.7%	100.0%
전체	빈도	693	520	102	98	598	2011
	행%	34.5%	25.9%	5.1%	4.9%	29.7%	100.0%

* N=2011, Pearson 카이제곱값=20.519, 자유도=16, 유의확률(양측검정)=0.198/
소득과 새누리당 투표 여부의 Pearson 상관계수값=0.054, 유의확률=0.015/
소득과 기권 여부의 Pearson 상관계수값=-0.079, 유의확률=0.000

www.kci.go.kr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 지지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면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5분위 소득, 교육 및 SES 외에도 연령을 통제한 세대별 5분위 SES의 경우에도 가장 진보적이라 할 통합진보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평균값이 다른 선택을 한 집단의 평균값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지지자는 (냉소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고소득·고학력 진보라는 의미의 '강남좌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의 대리변수라 할 자가 소유 여부에서는 전체의 72.9%, 가장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의 82.6%, 가장 낮은 기권한 유권자의 62.1%에 비해 기권한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64.7%의 자가 소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재산은 많지 않지만 교육에 의해 일정 이상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연령을 통제하고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가장 진보적인 통합민주당에 투표하지 않는 현상은 계급배반적이라는 해석보다는 집권 가능성이 없어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판단한 유권자의 합리적 행동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Ⅲ.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호

제2장의 이변인 분석에서는 투표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효과'를 통제한 후의 '계층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별 5분위' 변수들을 사용하였으나, 이하의 다변인 회귀분석에서는 각 분석 모형에 '5분위 연령'을 바로 포함하여 세대(연령)효과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5분위 소득'과 '5분위 교육'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 '5분위 SES'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두 중요 변수인 소득과 교육의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다.

www.kci.go.kr

1. 소득, 교육과 정책 선호

<표 4>는 <모형 a>의 독립변수에다가 '자가 여부'를 포함한 모형, 그리고 이 '자가 여부'를 포함한 모형에 독립변수로 '직업'을 더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모형 a>와 <표 1>의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 b>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면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간 단계의 모형에서 회귀계수의 크기나 그 유의확률이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표 4>에서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베타값, t값 등을 역시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는데, <표 4> 및 이하의 모든 표에서 굵은 기울임체의 계수값과 유의확률은 해당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표 4> 및 이하의 모든 표에서 가변수인 독립변수의 경우 괄호 안의 집단은 기준집단(reference group)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모형 a>에서 '성별'의 경우는 '여자'가 기준집단이라는 것이다.

교육과 소득은 각 쟁점영역에서 진보-보수의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표 4>는 '지역'과 '5분위 연령'이 외교안보쟁점, 경제쟁점, 사회쟁점 및 이념평균에 '5분위 교육'이나 '5분위 소득'에 비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쟁점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 선호에서 진보적으로 되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호남이 진보적인 정책 선호, 그리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가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보고를 생략하였지만 외교안보쟁점에 속하는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교육의 계수값만은 이슈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의 계수값은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모형 a>와 <모형 b> 모두에서 양으로 나타났고(즉, 교육 수준이 높으면 한미동맹 강화에 찬성할 확률이 커짐), 국가보안법의 경우 <모형 a>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 <모형 b>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대북정책의 경우에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www.kci.go.kr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책 선호

모형	독립변수		외교안보쟁점 평가		경제쟁점 평가		사회쟁점 평가		쟁점평가 이념평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a	상수		2.514	0.000	2.188	0.000	2.660	0.000	2.455	0.000
	성별(여자)		.025	.165	-.003	.853	*.076*	*0.001*	*.036*	*.013*
	5분위 연령		*.038*	*.000*	*.043*	*.000*	*.038*	*.000*	*.047*	*.000*
	5분위 소득		.009	.198	*.029*	*.000*	*.019*	*.026*	*.020*	*.000*
	5분위 교육		*-.021*	*.010*	.005	.515	-0.14	.160	-.009	.163
	사례수		2033		2036		2035		2037	
	R-제곱		.031		.023		.019		.047	
b	상수		2.509	0.000	2.282	0.000	2.579	0.000	2.450	0.000
	성별(여자)		.024	.209	-.011	.565	*.063*	*.010*	.026	.087
	5분위 연령		*.035*	*.000*	*.037*	*.000*	*.040*	*.000*	*.044*	*.000*
	5분위 소득		.009	.205	*.018*	*.012*	*.023*	*.011*	*.017*	*.004*
	5분위 교육		*-.021*	*.009*	.000	.993	-.008	.437	-.008	.222
	자가 여부(기타/무응답)		.006	.787	.022	.286	-.002	.932	.014	.415
	지역	수도권								
		충청	-.038	.207	*-.186*	*.000*	-.015	.690	*-.085*	*.001*
		호남	*-.205*	*.000*	*-.287*	*.000*	.042	.277	*-.151*	*.000*
		TK	*.167*	*.000*	-.014	.632	*.087*	*.023*	*.084*	*.000*
		PK	*.101*	*.000*	.016	.526	*.200*	*.000*	*.119*	*.000*
		강원/제주	.07	.693	*-.107*	*.014*	-.021	.699	-.041	.236
	직업	기타/무직/무응답								
		서비스	.006	.848	.000	.991	-.065	.085	-.015	.544
		판매	.008	.754	.006	.796	.047	.130	.027	.173
		농/임/어업	.022	.729	.076	.230	-.014	.860	.027	.591
		기능	-.041	.290	-.035	.376	.027	.587	-.002	.943
		기계조작 및 조립	.025	.726	*.174*	*.017*	.158	.088	*.134*	*.022*
		가사관련 단순노무	-.043	.641	.063	.500	.167	.159	.055	.465
		기타 단순노무	.083	.084	.060	.216	.053	.388	.073	.059
		사무	-.016	.590	.030	.331	.000	.998	.004	.884
		전문가	-.017	.715	.032	.505	.076	.207	.034	.376
		임직원 및 관리자	.027	.780	.115	.238	-.200	.108	-.021	.787
	사례수		2033		2036		2035		2037	
	R-제곱		.088		.084		.051		.019	

경제쟁점의 경우 연령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 선호에서 보수적으로 되며,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보수적으로 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호남과 충청뿐만 아니라 강원/제주가 수도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진보적인 것에 더해 TK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표 1>의 지역별 5분위 소득평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 지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경제쟁점에 속하는 한미FTA, 성장 대 복지, 비정규

www.kci.go.kr

노동, 생필품관리에 대한 정책 선호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 양태는 유사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교육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비정규노동과 생필품관리에서 음으로 나타났고, 소득의 계수값은 여전히 양이지만 한미FTA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지역의 경우 TK는 한미FTA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도권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미FTA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등과 같은 외교안보쟁점으로도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쟁점의 경우에는 경제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 선호에서 보수적으로 되고, 경제쟁점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진보적으로 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남의 보수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호남의 보수성이 부각된다. 사회쟁점의 경우 다른 쟁점 영역과는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수적이다. 사회쟁점에 속하는 학교체벌, 대체복무, 사형폐지 대한 정책 선호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 눈에 띄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학교체벌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소득 상층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체벌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상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이념 평균을 보면, 사회쟁점의 경우와 같이 연령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 선호에서 보수적으로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진보적으로 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남은 보수적이고 호남과 충청은 진보적이다.

전체적인 이념 평균 그리고 특히 계급정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경제쟁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이 된다는 것은 연령, 지역, 성별 등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 계급배반적 이념 성향이 아니라 '계급적'인 이념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쟁점영역에서의 정책선호에 근거한 이념이 아니라 주관적 이념

14) 사실 <표 2>의 '5분위 소득'과 '경제 영역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도 계급배반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www.kci.go.kr

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2장 각주 12에서 언급한 주관적 이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 a>와 <모형 b>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교육과 소득의 계수값이 모두 음으로 나타났다.

2. 사회경제적 지위, 정책 선호와 정부 평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현재의 정부가 얼마나 국정과 국가 경제를 잘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 선호를 연결고리로 하여 이 정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5>에서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업변수의 경우 두 종속변수 중 최소한 하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판매 종사자(가게운영,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와 전문가(교수, 변호사, 간호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 한하여 계수값과 유의 수준을 표시하고 나머지 직업 범주는 생략하였다.

<표 5>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A>에서는 소득은 양의 계수값, 교육은 음의 계수값을 갖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15]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국정운영 평가 간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2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정책 선호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국정운영 평가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B>에서는 '외교안보쟁점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며, 그 다음으로 '경제쟁점 평가'가 중요하며, '사회쟁점 평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자가 여부 및 직업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www.kci.go.kr

<표 5>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부 평가

모형	독립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가 경제상태 평가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A	상수		1.769	0.000	2.282	0.000
	성별(여자)		-.057	.103	-.011	.565
	5분위 연령		*.113*	*.000*	*.037*	*.000*
	5분위 소득		.020	.126	*.018*	*.012*
	5분위 교육		-.010	.523	.000	.993
	자가 여부(기타/무응답)		.028	.455	.022	.286
	직업	기타/무직/무응답				
		판매	-.019	.666	*-.154*	*.002*
		전문가	*-.251*	*.004*	*-.217*	*.027*
	사례수		2029		2030	
	R-제곱		.062		.019	
B	상수		0.689	0.000	1.537	0.000
	성별(여자)		-.067	.044	.055	.162
	5분위 연령		*.093*	*.000*	*.029*	*.066*
	5분위 소득		.012	.351	.021	.149
	5분위 교육		-.011	.457	.017	.317
	자가 여부(기타/무응답)		.011	.751	.072	.086
	직업	기타/무직/무응답				
		판매	-.041	.331	*-.150*	*.002*
		전문가	*-.226*	*.006*	-.183	.058
	지역	수도권				
		충청	-.046	.388	*-.217*	*.000*
		호남	*-.383*	*.000*	*-.265*	*.000*
		TK	*.234*	*.000*	.024	.700
		PK	.036	.412	.094	.069
		강원/제주	.113	.130	-.075	.393
	외교안보쟁점 평가		*.338*	*.000*	*.189*	*.000*
	경제쟁점 평가		*.101*	*.011*	*.127*	*.006*
	사회쟁점 평가		.024	.445	-.031	.406
	사례수		2029		2030	
	R-제곱		.166		.060	

'국가 경제상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이 <모형 B>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지만 그 계수값에서 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으므로, 여기서 정책 선호는 매개변수라기보다는 소득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해야 할 변수라고 할 것이다.[16] '국가 경제상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도 '사회쟁점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는

16) 정책 선호와 소득의 상관관계는 연령과 소득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정책 선호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제한 경우와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연령의 경우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엄청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www.kci.go.kr

달리 음의 계수값을 나타낸다.

'국가 경제상태 평가'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둘 모두에서 전문가가 학생, 전업주부 등을 포함한 기준집단에 비해 비호의적인 평가를 한 것은 전문가 집단의 직업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 선호의 매개변수로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부 평가 사이에서가 아니라 '5분위 연령'과 정부 평가 사이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정책선호를 보이고, 연령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B>에서 <모형 A>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Ⅳ.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선택

1.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선호, 정치적 선택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SES 모델은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계급배반적 투표가 일어나는가? <표 6>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혹은 통합진보당을 선택한 유권자와 기권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에서는 지면관계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 및 직업 범주의 경우 그 범주와 B값을 표시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지역' 및 '직업' 범주와 다항 로지스틱분석에서 통상적으로 보고되는 표준오차, Wald, <모형 4> 이외의 모형에서의 exp(B) 등의 값을 생략하였다. e를 B제곱한 값인 exp(B)는 다항 로지스틱분석의 특수한 예라 할 이항 로지스틱분석에서는 '승산비(odds ratio)', 다항 로지스틱분석의 경우에는 '상대위험률(relative risk ratio)'을 나타낸다. 참조(기준) 범주를 0으로 코딩했을 때, 종속변수의 값이 k일 확률인 $\Pr(Y=k)$을 기본 범주에 속할 확률인 $\Pr(Y=0)$로 나눈 값($=\frac{\Pr(Y=k)}{\Pr(Y=0)}$)을 ($Y=k$의 $Y=0$에 대한) '상대위험(relative risk)'이라 한다.[17] 다항 로지스틱분석에서 상대위험률

www.kci.go.kr

exp(B)는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한데 해당 독립변수의 값만 1단위 증가했을 때의 상대위험을 증가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위험으로 나눈 값이다. 즉, 특정 독립변수의 계수값 B는, 다른 것은 동일한데 이 독립변수의 값만 1단위 증가하면 '참조(기준) 범주인 기권에 속할 확률에 비교한 k범주에 속할 확률'에 비해 '참조 범주에 속할 확률에 비교한 k범주에 속할 확률'이 exp(B)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가 0보다 크면 exp(B)가 1보다 크므로 해당 독립변수값이 증가하면 참조 범주에 속할 확률에 비교한 k범주에 속할 확률(즉, 상대위험)이 증가한다. 참조 범주를 1로 했을 때의 $Y=i$의 $Y=1$에 대한 상대위험률을 R_{i1}, 해당 회귀식의 독립변수의 값을 B_{i1}이라 하면 참조 범주가 j인 경우의 $Y=k$의 $Y=j$에 대한 상대위험률 R_{kj}는 R_{k1}/R_{j1}의 값과 같고 $B_{kj}=B_{k1}-B_{j1}$가 된다. 예를 들면 '기권'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참조 범주를 변경하는 경우 <모형 5>의 회귀식에서 '새누리당'의 교육의 계수값은 <모형 4>의 '새누리당'의 교육계수값 0.176에서 '통합민주당'의 교육계숫값 0.089을 뺀 0.087이 되는 것이다.

<표 6>에서 보면 '5분위 연령'은 그 계수값이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범주가 '기권'인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에서 보면 연령 외에도 '5분위 교육', '5분위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SES 모델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모형 1>과 <모형 2>의 새누리당의 교육 계수값과 소득 계수값이 각각 민주통합당의 교육 계수값과 소득 계수값보다 크므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계급배반적이 아니라 '계급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19]

---

17) 이항 로지스틱분석에서는 통상 기본 범주를 0으로 코딩하고 다른 하나의 범주를 1로 코딩하므로 상대위험은 $\Pr(Y=1)/\Pr(Y=0)$가 되고, 1을 승리, 0을 패배로 해석하여 이 상대위험을 '승산(odds)'이라고 부른다.

18) 투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표 8>의 이항 로지스틱분석의 결과에서는 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 예를 들어 <모형 2>에서 참조 범주를 '민주통합당'으로 변경하여 구한 새누리당의 '5분위 교육'의 계수값 0.046(=0.152-0.106)의 유의확률은 0.453이다. 또한 <모형 2>에서 지역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한 모형에서는 자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

www.kci.go.kr

<표 6>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선호, 정치적 결정

	기권 외 3정당[a]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새누리당	절편	-3.682	.000	-4.068	.000	-7.235	.000	-8.657	.000		-8.508	.000
	성별(여자)	.013	.920	-.009	.951	-.039	.791	-.001	.994	.999	-.104	.497
	5분위 연령	*.966*	*.000*	*.942*	*.000*	*.898*	*.000*	*.862*	*.000*	2.369	*.318*	*.000*
	5분위 교육	*.164*	*.004*	*.152*	*.013*	*.160*	*.010*	*.176*	*.006*	1.192	.087	.185
	5분위 소득	*.155*	*.001*	.099	.066	.072	.190	.055	.330	1.057	-.067	.248
	지가 여부(기타/무응답)			*.650*	*.000*	*.663*	*.000*	*.644*	*.000*	1.904	.293	.087
	직업(기타/무직/무응답)							충청	.578	1.782	충청	.743
	지역(서울/인천/경기)			호남	-1.972	호남	-1.877	호남	-1.607	.201	호남	-2.280
				PK	0.717	PK	0.590	PK	0.567	1.763	TK	1.257
											PK	0.431
	외교안보쟁점 평가					*.515*	*.006*	.352	.073	1.422	*.779*	*.000*
	경제쟁점 평가					.310	.082	.254	.165	1.289	*.596*	*.001*
	사회쟁점 평가					*.440*	*.002*	*.447*	*.002*	1.564	*.355*	*.01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606*	*.000*	1.833	*1.028*	*.000*
	국가 경제상태 평가							*.283*	*.001*	1.328	*.233*	*.011*
민주통합당(모형 5에서는 기권)	절편	-2.229	.000	-2.441	.000	-.627	.351	-.149	.832		.149	.832
	성별(여자)	.105	.407	.163	.248	.138	.330	.103	.475	1.108	-.103	.475
	5분위 연령	*.530*	*.000*	*.498*	*.000*	*.520*	*.000*	*.545*	*.000*	1.724	*-.545*	*.000*
	5분위 교육	.101	.076	.106	.082	.093	.131	.089	.150	1.093	-.089	.150
	5분위 소득	*.108*	*.024*	.097	.068	*.111*	*.039*	*.122*	*.025*	1.130	*-.122*	*.025*
	지가 여부(기타/무응답)			*.381*	*.009*	*.379*	*.010*	*.351*	*.017*	1.421	*-.351*	*.017*
	직업(기타/무직/무응답)			호남	.896	호남	.777	호남	.674	1.962	호남	-.674
	지역(서울/인천/경기)			TK	-1.230	TK	-1.177	TK	-1.176	.309	TK	1.176
	외교안보쟁점 평가					*-.509*	*.005*	*-.427*	*.022*	.652	*.427*	*.022*
	경제쟁점 평가					*-.347*	*.043*	*-.342*	*.048*	.711	*.342*	*.048*
	사회쟁점 평가					-100	.463	.093	.500	1.097	*-.093*	*.50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422*	*.000*	.656	*.422*	*.000*
	국가 경제상태 평가							*.051*	*.553*	1.052	*-.051*	*.553*
통합진보당	절편	-4.444	.000	-4.778	.000	.180	.871	1.093	.343		1.242	.272
	성별(여자)	*.473*	*.035*	.325	.187	.300	.231	.241	.347	1.272	.138	.590
	5분위 연령	*.380*	*.000*	*.352*	*.001*	*.395*	*.000*	*.423*	*.000*	1.527	-.122	.249
	5분위 교육	*.266*	*.007*	*.260*	*.014*	.207	.055	.196	.073	1.216	.107	.327
	5분위 소득	*.186*	*.027*	.171	.063	*.226*	*.017*	*.245*	*.011*	1.278	.123	.195
	지가 여부(기타/무응답)			-.027	.910	.002	.992	-.037	.884	.964	-.388	.124
	직업(기타/무직/무응답)			사무	.695							
	지역(서울/인천/경기)			전문가	1.197	전문가	1.208				임직원 등	1.843
				호남	1.199	호남	0.987	호남	0.793	2.211		
	외교안보쟁점 평가					*-1.020*	*.001*	*-.776*	*.013*	.460	-.349	.255
	경제쟁점 평가					-.510	.080	-.433	.140	.648	-.092	.750
	사회쟁점 평가					*-.499*	*.031*	*-.514*	*.029*	.598	*-.606*	*.009*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847*	*.000*	.429	*-.424*	*.027*
	국가 경제상태 평가							-.021	.889	.980	-.071	.627
사례수		1913		1913		1907		1905			* <모형 4>에서 참조 범주만 '기권'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뀐 모형임	
Cox와 Snell의 R-제곱		.190		.217		0.347		.399				
Nagelkerke R-제곱		.207		.237		0.379		.436				

* a: 참조 범주는 '기권'임

하게 새누리당 지지자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지지자를 구분하고 있어, 계급투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여지도 있다.

www.kci.go.kr

참조 범주를 '민주통합당'으로 한 <모형 5>에서 보면 교육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지역과 정치적 선호변수 그리고 연령변수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이나 소득은 비록 정책 평가 및 정부 평가 등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의 선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치적 선호는 교육이나 소득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의 선택을 매개하는 변수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치적 선호는 연령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의 선택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0]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 선호 및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당 선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 투표 여부의 결정 요인 및 투표자와 참여자의 정책 선호 차이

이미 제1절에서 <표 6>의 결과를 활용하여 SES 모델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다항 로지스틱분석 결과의 해석이 그렇게 명료하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투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7>은 기본적 변수를 포함한 <모형 1>에서 시작하여 독립변수로 다른 변수들을 더 포함하였을 때의 이항 로지스틱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지면 관계상 지역 및 직업 범주는 생략하였는데, 지역 혹은 직업의 굵은 기울임체의 유의확률은 5% 유의 수준에서 해당 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표 7>의 <모형 1>에서 보면 연령, 교육, 소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을 보면, 독립변수로 자가 여부를 포함했을 때는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을 잃고 그 대신 자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직업이나 정치적 선호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20) 참조 범주를 '민주통합당'으로 하여 <모형 2>에서 <모형 3>을 거쳐 <모형 4>로 가면서 '5분위 연령'의 계수값과 유의확률의 변화를 분석하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www.kci.go.kr

없다. <모형 2>와 <모형 3>의 유사 R-제곱값을 비교해 보면, 정치적 선호 관련변수는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ES 모델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기권자와 투표자의 결정 요인

사례수: 2028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독립변수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절편	-1.898	.000	-2.240	.000	-2.451	.000	-.354	.403	-.572	.185	-2.059	.000
성별(여자)	.110	.305	.118	.315	.113	.340					.089	.409
5분위 연령	*.699*	*.000*	*.682*	*.000*	*.676*	*.000*					*.699*	*.000*
5분위 교육	*.151*	*.002*	*.146*	*.004*	*.145*	*.005*					*.148*	*.002*
5분위 소득	*.104*	*.010*	.066	.142	.062	.165					*.101*	*.013*
자가 여부(기타/무응답)			*.425*	*.000*	*.417*	*.001*						
직업(기타/무직/무응답)				.235		.222						
지역(서울/인천/경기)				*.032*		*.024*						
외교안보쟁점 평가			-.055	.713	-.094	.539	.081	.550	-.030	.828	-.144	.337
경제쟁점 평가			-.117	.410	-.135	.341	.065	.605	.012	.925	-.148	.281
사회쟁점 평가			.191	.090	.197	.081	*.306*	*.003*	*.307*	*.003*	*.226*	*.04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47	.568			*.196*	*.008*	.001	.993
국가 경제상태 평가					.109	.121			.094	.144	.119	.084
Cox와 Snell의 R-제곱	.126				.147		.006		.012		.130	
Nagelkerke R-제곱	.180				.210		.009		.017		.185	

기권자와 투표자 사이에 정치적 선호의 차이가 있는가? 만일 두 집단 간 정치적 선호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불균등한 참여가 최소한 선거를 통하여서는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김성연 2015). <표 8>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의 각 쟁점에서 기권자와 투표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 왼쪽 정렬한 유의확률은 이 이슈에서 기권자 혹은 5분위 연령 중 가장 젊은 집단이 보수적이거나 호의적인 선호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물론 기울임체의 유의확률은 평균 차이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www.kci.go.kr

<표 8> 기권자와 투표자의 차이

	투표 여부	N	평균	평균 차이 유의확률	5분위 연령	N	평균	평균 차이 유의확률
대북정책	기권	601	2.35	0.142	1	407	2.38	0.615
(진보 1-보수 4)	투표	1445	2.31		5	406	2.36	
한미동맹	기권	599	2.77	0.157	1	407	2.69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4	2.82		5	405	3.00	
국가보안법	기권	598	2.62	*0.005*	1	407	2.63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1	2.72		5	402	2.85	
외교안보쟁점 평가	기권	600	2.58	0.065	1	407	2.57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3	2.62		5	404	2.74	
한미FTA	기권	597	2.43	*0.026*	1	406	2.38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1	2.51		5	401	2.57	
성장대복지	기권	601	2.71	0.522	1	406	2.60	*0.004*
(진보 1-보수 4)	투표	1443	2.69		5	406	2.76	
비정규노동	기권	598	2.28	*0.026*	1	407	2.23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3	2.36		5	402	2.44	
생필품관리	기권	601	2.20	0.108	1	407	2.29	*0.002*
(진보 1-보수 4)	투표	1444	2.15		5	406	2.13	
경제쟁점 평가	기권	601	2.41	0.302	1	407	2.38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5	2.43		5	406	2.47	
학교체벌	기권	600	2.74	*0.003*	1	406	2.74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1	2.85		5	405	2.95	
대체복무	기권	597	2.82	*0.010*	1	405	2.88	*0.030*
(진보 1-보수 4)	투표	1439	2.92		5	402	3.00	
사형폐지	기권	600	2.74	0.290	1	407	2.76	0.301
(진보 1-보수 4)	투표	1442	2.78		5	404	2.82	
사회쟁점 평가	기권	601	2.77	*0.001*	1	407	2.79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4	2.85		5	406	2.92	
쟁점 평가 이념 평균	기권	601	2.61	*0.001*	1	407	2.59	*0.000*
(진보 1-보수 4)	투표	1446	2.66		5	407	2.75	
대통령국정운영 평가	기권	600	2.01	*0.001*	1	407	1.95	*0.000*
(부정 1-긍정 4)	투표	1444	2.14		5	405	2.39	
국가경제 평가	기권	600	2.37	*0.016*	1	407	2.46	0.104
(부정 1-긍정 4)	투표	1445	2.47		5	405	2.55	

우선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장 대 복지'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대조집단(투표자 혹은 연령 상위 20% 집단)에 비교한 기권자의 정치적 선호는 젊은 층의 정치적 선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21] 이는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표 7>의 <모형 3>에서 보듯이 연령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정부 평가 및 '쟁점 평가 이념 평균'에서 기권자와 투표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만, 쟁점 영역별로 보

21) 젊은 층이 모든 이슈에서 보수적이 아니라는 것은 대북정책과 생필품관리에서 나타난다.

www.kci.go.kr

면 <표 7>의 <모형 4>의 결과에 반영되어 있듯이 '외교안보쟁점 평가'와 '경제쟁점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쟁점 평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을 따로따로 보면, 국가보안법, 한미FTA, 비정규노동, 학교체벌, 대체복무 등에서 기권자와 투표자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투표자가 선거에서 기권자를 잘 대표하기는 어렵고, 불균등한 참여가 선거를 통하여서도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2]

Ⅴ.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첫째, SES 모델은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연령을 통제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교육, 소득 등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쟁점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이 되는 계급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즉, 계급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적 선호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연령을 통제하는 경우에 사회적 계층/계급이 계급배반적으로 투표하지는 않지만 계급투표 현상이 일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실제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즉, 아직도 지역적 균열 및 세대균열과 이에 따른 이념균열이 압도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다. 넷째,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들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 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글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22) 김성연(2015)의 경우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데, 자료의 차이 이외에도 검증 방법론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김성연의 경우 정치적 선호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표 7>의 <모형 4>나 <모형 5>에 해당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더 보탠 <모형 2>, <모형 3>이나 <모형 6>에서도 앞의 모형에서 나타난 기권자와 투표자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표 7>의 각종 모형은 투표 여부를 설명하는 모형이며, <표 8>이 투표자와 기권자의 정치적 선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www.kci.go.kr

의 표본 크기가 2047개로 매우 커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했다. 또한 사용한 자료가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다른 자료에 비해 매우 예외적일 가능성도 물론 있고, 더 나아가 제19대 총선 자체가 예외적인 선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의 함의는 사회적 계층 간 목소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목소리 크기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당체계 및 선거제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적 선호가 계급투표로 부를 만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이러한 정치적 선호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갑윤 외 2014, 131-132). 정치적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위해서는 정당 및 정당체계의 변화 외에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23] SES 모델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소외에 대해 우려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장집 2005, 26; 김영태 2012).

23)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는 규제 중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도 늘려야 할 것이다.

www.kci.go.kr

<부록> 정책 선호 및 국정운영/경제 평가와 관련한 설문항

1. 다음의 각 정책에 대해서 귀하께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④	③	②	①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④	③	②	①
(5)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④	③	②	①
(6) 정부가 유가(油價) 등 특정 생필품값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8)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대북정책에 대한 다음 4가지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정부의 통일정책은

<평화공존 지향> <흡수통일 지향>

① 1 ② 1.33 ③ 1.67 ④ 2 ⑤ 2.33 ⑥ 2.67 ⑦ 3 ⑧ 3.33 ⑨ 3.67 ⑩ 4

(2) 정부는 북한과

<교류, 협력> <단절, 압박>

① 1 ② 1.33 ③ 1.67 ④ 2 ⑤ 2.33 ⑥ 2.67 ⑦ 3 ⑧ 3.33 ⑨ 3.67 ⑩ 4

(3) 정부는 통일을 위해

<남북 주도 직접 협상> <주변국과 다자 협상>

① 1 ② 1.33 ③ 1.67 ④ 2 ⑤ 2.33 ⑥ 2.67 ⑦ 3 ⑧ 3.33 ⑨ 3.67 ⑩ 4

www.kci.go.kr

(4) 정부는 통일을 위해

<조건 없이 지원> <북한 태도 따른 지원>

① 1 ② 1.33 ③ 1.67 ④ 2 ⑤ 2.33 ⑥ 2.67 ⑦ 3 ⑧ 3.33 ⑨ 3.67 ⑩ 4

3.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못했다 ② 대체로 잘 못했다
③ 대체로 잘했다 ④ 매우 잘했다

4.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다소 나빠졌다
③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④ 다소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_____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와 사회계층.”『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3호, pp. 5-28.

고 원 (2009).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3호, pp. 29-60.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아태연구』. 제22권. 제4호, pp. 41-67.

김수진 (2008).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대한 고찰.”『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제3호, pp. 5-27.

김영태 (2012)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 참여: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3호, pp. 45-69.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1호, pp. 93-122.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 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한국정치연구』. 제14집. 제1호, pp. 147-193.

박찬욱·강원택 편 (2012).『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나남.

서복경·한영빈 (2014). “계층의식이 정책 선호 및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갑윤·이현우 편.『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오름, pp. 139-170.

손낙구 (2010).『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후마니타스.

어수영·곽진영 (2001).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pp. 165-188.

윤평중 (2011). “강남좌파와 지식인의 아편.”『철학과현실』. 제90호, pp. 179-186.

이갑윤 (2011).『한국인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이갑윤·이지호·김세걸 (2014).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이갑윤·이현우 편.『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오름, pp. 109-139.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pp. 137-166.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4호, pp. 51-70.

www.kci.go.kr

전병유·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동향과 전망』. 제91호, pp. 9-51.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2호, pp. 37-74.

조성대 (2006).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pp. 51-74.

최장집 (1996).『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_____ (2005).『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한귀영 (2013).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동향과 전망』. 제89호, pp. 9-40.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Leighley, Jan E. (1995). “Attitudes,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A Field Essay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48. No. 1, pp. 181-209.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pp. 1-14.

Schlozman, Kay Lehman, Sidney Verba and Henry E. Brady (2012). *The Unheavenly Chorus: Unequal Political Voice and the Broken Promise of American Democrac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sk Force on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2004). “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2. No. 4, pp. 651-666.

Verba, Sidney (1996). “The Citizen as Respondent: Sample Surveys and American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No. 1, pp. 1-7.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논문투고일 : 2016년 05월 20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5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6월 14일 |

www.kci.go.kr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2 (2016)

Socioeconomic Status, Political Preference and Political Choice in Korea:
Evidence from the 19th General Election

Joon Pyo Jung
(Dept. of Politic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Is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 which predicts that the higher in socioeconomic status a person is, the more likely he or she is to vote not applicable to Korean elections? Doesn't one's socioeconomic status affect one's political preference and choice in Korea? This paper, by empirically analyzing data from the 19th Korean General Election, claims that people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show different political preference from peopl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people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participate less in politics than peopl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If these claims have at least some validity, then it is high time to worry about the unequal political outcome caused by unequal voice between the socially advantaged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 Key words: Socioeconomic Status, Class Politics, Abstention, Political Preference, Political Choice

www.kci.go.kr